

KWDI

해외통신

2020년 8월 2차 (2020.8.17 ~ 8.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탈리아 ITALY

이탈리아, 경구용 임신중절약 제도 개선으로 복용허용 기간 연장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2020년 8월 초, 이탈리아 보건부 로베르토 스페란자(Roberto Speranza) 장관은 경구용 임신중절약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대확산으로 외출 및 병원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경구용 임신중절약 제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보다 커지기도 했다. 올해 들어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대거 투입되면서 병원들이 임신중절 시술을 연기하거나 아예 중지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복용허용 기간이 연장되었다. 카톨릭 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1978년 낙태를 합법화했으며, 2009년에는 법적으로 임신 7주까지 경구용 임신중절약 복용을 허용했었다. 이번에 임신 9주까지로 그 복용허용 기간을 다소 연장한 것이다. 실제로는 여성들이 임신 7주가 되기 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꼭 입원해서 경구용 임신중절약을 처방 및 복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존 이탈리아 제도 상으로는 임신 7주 이내에 병원에 3일간 입원해서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했다. 경구용 임신중절약 복용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하나, 이탈리아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약을 복용하여 임신중절을 한 경우는 18%정도에 그쳤다. 당일 시술도 가능하다고는 하나, 실제 20개 지역 중 5개 지역 정도에서만 외래환자 접수 및 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 및 여성의 낙태 선택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은 기존 입원절차를 통한 임신중절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낙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이 임신중절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는 약 10명중 7명 정도의 이탈리아 내 산부인과 의사가 가톨릭 종교상의 신념 등의 이유로 임신중절술을 거부하는 양심적 거부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 AP(2020.08.08.),
"Italy approves outpatient use for abortion pill",
<https://apnews.com/60df27cd985e778cd25a16926546012d>
(접속일: 2020.08.22.)
- Independent (2020.08.14.),
"Italy approving outpatient use for the abortion pill is finally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women's rights",
<https://www.independent.co.uk/voices/italy-abortion-pill-women-rights-far-right-opposition-church-a9669506.html>
(접속일: 2020.08.22.)
- Human Rights Watch(2020.07.30.),
"Italy: Covid-19 Exacerbates Obstacles to Legal Abortion",
<https://www.hrw.org/news/2020/07/30/italy-covid-19-exacerbates-obstacles-legal-abortion>
(접속일: 2020.08.22.)

앞으로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은 외래환자로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약 30분 정도 병원에서 전반적인 상태를 검사 받게 된다. 그리고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신중절약을 받아 귀가할 수 있게 된다. 이탈리아 보건부 측은 약 10여 년간의 경구용 임신중절약 복용 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입원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복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인권관련 국제 비정부기구인 Human Rights Watch는 지난 5월부터 7월, 이탈리아 내 외과의사, 학계 전문가, 여성인권 운동가 등 17명, 그리고 임신중절 관련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했던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담은 공식 서한을 이탈리아 보건부측에 제출하기도 했다. Human Rights Watch 측은 법적으로 임신중절이 합법화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임신중절을 거부하고, 여성들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간 내에 임신중절을 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하고 심지어는 이웃국가로 원정 시술을 가야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번 경구용 임신중절약 지침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물론 적지 않다. 한 보수단체는 여성의 낙태권 반대를 주장하는 온라인 청원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런 이슈에 대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전문가 및 시민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반발이 거센 편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된 제도가 이행되면서, 앞으로 이탈리아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지켜볼만 하다.

독일 GERMANY



독일, 민간 및 공공 남녀동등 참여법 시행 이후 여성고위직 비율 소폭 증가

채혜원 독일통신원

독일의 민간 및 공공 부문 고위직 여성 할당제로 여성 이사진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과 크리스틴 람브레이트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독일 기업의 경영이사회 여성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6년 1월 ‘민간 및 공공 부문 고위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FüPoG)’ 시행 이후 2017년에 기업 경영이사회 여성 비율이 25%에서 32.5%로 증가했고, 올해는 35.2%로 증가했다.

‘민간 및 공공 부문 고위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FüPoG)’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남녀 임원직 비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독일 상장기업의 경영이사회 여성 비율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30% 여성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남성 이사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독일 상장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이사회’와 이를 감독하는 ‘감독이사회’로 나뉘는데, FüPoG 법안에 따른 ‘여성 경영이사회 30% 할당제’ 시행 이후 여성 경영이사회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2020),
“Gleichstellungsindex 2019
-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n obersten
Bundesbehörden”,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Oeffentlicher-Dienst/Publikationen/_publikationen-innen-gleichstellungsindex.html%20
(접속일:2020.8.19)

그러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경영이사회’ 비율과 달리 ‘감독이사회’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독일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감독이사회 여성 비율은 7.7%에 그쳤다. 이는 약 80%의 기업에 여성 이사가 없음을 의미한다. 법안에 따라 상장기업은 여성할당제 목표 수치를 설정하게 되어있는데, 상장기업의 약 70%가 감독이사회 여성 비율 관련 성과를 0%로 보고했다.

독일 정부는 여성 고위직 비율은 자발적으로 늘지 않으며, 할당제와 같이 강제조치만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여성 경영이사회 30% 할당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여성 경영이사회 비율은 1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람브레이트 법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여성 고위직 할당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할당제 시행을 독일의 모든 기업으로 확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에는 경영책임을 맡을 수 있는 여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 정부는 ‘민간 및 공공 부문 고위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FüPoG)’에 따라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다. 기업에 비해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이 높긴 하나, 여전히 주요 보직에 여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방 당국 내 장관직, 의회 최고비서직 등을 포함한 고위직의 여성 비율은 34%다.

고위직보다 조금 낮은 관리직 직군의 여성 비율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1% 떨어졌다. 23개 독일 연방 당국의 관리자 직군의 여성은 총 10,971명(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관리자의 46%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45%로 낮아졌다. 독일 연방 당국의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은 53%다.

이와 함께 연방 정부는 정부 관련 감독위원회 구성에 보다 엄격한 할당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련 일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이 전문 위원회 역시 2016년 1월부터 여성 할당제 30%를 시행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여성 할당 비율을 50%로 높였다. 현재 연방 정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540개가 있으며, 이 중 239개 위원회는 연방정부 기관에서 3명 또는 4명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임명한 위원회의 경우 여성 비율은 현재 45.4%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매년 공공부문의 남녀 고위직 비율 실태를 파악하는 ‘독일 남녀평등 지수(Gleichstellungs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분석 대상인 독일 연방 당국에는 14개 연방정부부처 외에도 대통령 사무실, 헌법재판소, 회계감사원, 연방총리공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은 3.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발표자료(2020.06.10.), “Frauen in Führungspositionen: Freiwillig tut sich wenig – nur feste Vorgaben wirk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frauen-in-fuehrungspositionen-freiwillig-tut-sich-wenig-nur-feste-vorgaben-wirken/156474> (접속일:2020.08.19)



독일 여성, 대도시에서 여성대상 폭력에 대해 ‘불안’, ‘공포’ 시달리지만 정부 여성안전정책 부족

채혜원 독일통신원

- 일 대도시의 많은 여성이 길거리에서 폭력을 경험하며 도시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구호기구인 플랜 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 독일 지부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도시 안전’을 주제로 16세부터 71세 여성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독일 대도시인 함부르크, 베를린, 쾰른, 뮌헨에서 여성들은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 여성들은 인터랙티브 지도(Interactive Map)에 자신이 안전하거나 반대로 안전하지 않은 경험한 곳을 표시했고, 지도에 표시된 총 1,267개의 장소 중 80%가 안전하지 않은 장소로 지목됐다. 설문에 참여한 여성 중 25%는 도시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20%가 거리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 또는 위협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안전하지 않아 부정적인 곳으로 표시된 장소 중 25%의 도시 공간에서 여성들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예를 들어 여성들은 공원에서 조깅할 때, 길거리에서 언어 성폭력, 스토킹,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등을 경험하면서 도시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가로등이 어두운 거리 등 낮보다 밤에 더 큰 위협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지 않다고 표기된 곳 중 80% 정도가 밤이나 어두울 때 느끼는 불안감이 컸으며, 낮에 위협을 느낀 장소는 20% 정도였다. 이 외에도 여성들은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마약하는 사람을 접했을 때, 대중교통을 기다리거나 이용할 때, 공원이나 녹지공간에 있을 때, 위험 상황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들은 레스토랑이나 행사장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 플랜 인터내셔널은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인도 델리, 호주 시드니, 우간다 캄팔라, 페루 리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같은 주제로 설문 조사를 벌였으며, 결과는 독일과 비슷했다. 대부분 소녀와 여성이 도시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느낀다고 답했고, 총 21,000개 이상 장소에서 부정적으로 표기된 곳은 80% 이상이었다. 플랜 인터내셔널은 소녀와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4년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와 함께 ‘소녀를 위한 안전 도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현재 이집트, 인도, 페루, 우간다, 호주, 스페인 등 12개국에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 마이케 로트거 플랜 인터내셔널 독일 지부 이사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소녀와 여성이 두려움 없이 도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 자료를 통해 “길을 더 밝게 만들고 공원을 재구성하는 등의 도시계획조치도 필요하지만, 소년 및 소녀를 대상으로 성 역할 관련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전히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괴롭히는 것이 괜찮다는 식의 고정관념과 차별이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Plan International(2020.08.12.), “Frauen erleben in ihren Städten Angst, Belästigung und Gewalt”, <https://www.plan.de/news/detail/frauen-erleben-in-ihren-staedten-angst-belaestigung-und-gewalt.html> (접속일: 2020.08.21.)
- DW(2020.08.12.), “Women in Germany feel unsafe in large cities, study shows”, <https://www.dw.com/en/women-in-germany-feel-unsafe-in-large-cities-study-shows/a-54541135> (접속일: 2020.08.21.)
- stadt koeln(2020), “Sicher nach Hause”, <https://www.stadt-koeln.de/leben-in-koeln/soziales/gleichstellung/sicher-nach-hause?kontrast=schwarz> (접속일: 2020.08.23.)

상황이 이러지만 독일 정부의 눈에 띄는 여성안전정책은 없다. 다만 쾰른에서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웨이가드(WayGuard)'라는 휴대폰 앱을 운영하고 있다. 앱 사용자는 자신이 신뢰할만한 친구나 가족, 지인 등의 연락처를 등록해놓을 수 있고 집으로 귀가할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보여주고 전화나 채팅을 통해 연락할 수 있다. 귀가한 이후에도 이들에게 귀가 여부를 알리게 되어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앱 사용자 또는 앱 사용자와 연계되어 있는 또 다른 사용자가 긴급전화를 걸 수 있으며, 앱 중앙센터는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이나 응급, 의료서비스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웨이가드' 중앙센터에서 바로 경찰 또는 병원에 연결한다. '웨이가드' 앱은 AXA 보험회사 쾰른지사와 쾰른 경찰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앱은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30만 명 이상의 앱 등록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는 스위스에서 서비스를 오픈했다. '웨이가드' 앱 외에 쾰른시는 폭력피해자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보호센터 두 곳과 긴급전화(0221/376490)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CANADA



캐나다 여성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폭력 심화에 대응해 가정폭력 지원정책 다양화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가정폭력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해자의 감시망을 피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만한 창의적인 방안들은 내놓고 있다.

우선 캐나다 여성부(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WAGE)와 캐나다 여성재단(Canadian Women's Foundation)은 “도움의 신호 (Signal For Help)”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이 캠페인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지인이나 이웃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수신호를 홍보하고 있다. 가해자가 상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나 가정폭력 센터에 연락을 취하는 대신 지인과의 영상통화나 공공장소에 노출된 상황에서 한 손으로 주먹을 쥐되 엄지손가락을 주먹 안쪽으로 말아 쥐는 수신호를 취함으로써 구조 요청을 은밀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성부는 이 수신호를 어디서든 보게 된다면 이는 구조 요청이므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홍보 중이다.

참고자료

- Canadian Women's Foundation(2020), "Signal For Help", <https://canadianwomen.org/signal-for-help/> (접속일: 2020.08.19.)
- Unsafe at Home(2020), <https://unsafeathomeottawa.ca> (접속일: 2020.08.19.)
- Kitchissippi Times(2020.08.05), "Local text and online chat service supports women experiencing violence during COVID-19", <https://kitchissippi.com/2020/08/05/local-text-and-online-chat-service-supports-women-experiencing-violence-during-covid-19/> (접속일: 2020.08.19.)

한편, 오타와주에서는 오타와 여성에 대한 폭력 종결 연대(The Ottawa Coalitio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OCTEVAW)를 중심으로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협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웹터 연결, 상담을 문자나 온라인 채팅 서비스로 가능하게 하는 언세이프 엣 홈 오타와(Unsafe at Home Ottawa)라는 새로운 핫라인을 런칭하였다. 폭력 종결 연대에 의하면 오타와에서 기존 핫라인을 통한 구조 요청 건수는 코로나 비상사태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는 가정폭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요 창구인 학교, 직장이나 데이케어 등이 문을 닫고 가해자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화 중심의 기존 핫라인이 무용지물이 된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오타와의 관련 시민단체들과 주정부는 많은 여성들이 코로나 사태와 폭력 사태 이중의 위기에서 고립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시 감시 상태에서도 접근 가능한 핫라인을 만들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핫라인, 즉, 문자 기반의 서비스로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핫라인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언세이프 엣 홈 오타와의 상담 서비스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지원과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며, 안전하게 가해자와 지내거나 혹은 가해자로부터 피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임시 거쳐 주선하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세이프 엣 홈 오타와가 기존의 핫라인과 다른 점은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남기게 되면 이 메시지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어 나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열하더라도 신고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담사와 채팅으로 나눈 대화 또한 암호화 되어 오직 상담자만이 데이터에 추후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언세이프 엣 홈 오타와는 원래 오타와 주정부 재정으로 오타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겨냥하여 시작된 서비스이지만 이 서비스가 공영방송에 보도된 후 오타와 이외의 지역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서비스가 다른 주에도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폭력 종결 연대는 언세이프 엣 홈 오타와 핫라인이 현재 영어와 불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곧 다른 언어 상담도 가능하게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성소수자(LGBTQ2+) 커뮤니티와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로나 사태 동안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에 대한 두 그룹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오타와 이주여성 서비스센터(Immigrant Women's Services Ottawa)는 폭력 종결 연대와 함께 캐나다 사정에 익숙하지 않고 언어 장벽까지 있는 이주여성과 난민 여성들에게 더욱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영국, 임산부 및 18개월 미만 유아녀 여성재소자 보호를 위해 전담인력 배치 등 지원 정책 발표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 정부가 임산부 및 18개월 미만 아기와 함께 지내는 엄마 재소자 보호를 강화한다. 18개월 미만 아기와 엄마 재소자가 함께 지내는 교도소 내 특별 시설인 'Mother and Baby Units (MBU)'에 임산부 재소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영국 전역의 여성 전용 교도소에 임산부×엄마 재소자를 돕는 상주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여성 재소자를 위한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2020년 7월 3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임산부 및 엄마 재소자 보호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영국 전역의 여성 전용 교도소에 임산부와 엄마 재소자 전담 상주 전문가 배치, 임산부 재소자를 돌보는 교도관에게 추가 훈련 지원, 임산부와 엄마 재소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새 자문위원회(advisory group) 구성 등이 법무부가 공개한 정책에 포함됐다.
- 영국에서는 여성 재소자가 교도소 수감 기간 중 출산하면 아기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MSU에서 지낼 수 있다. 또한, 여성 재소자가 교도소 안에서 출산하지 않았더라도 18개월 미만 아기가 있다면 아기를 교도소에 데려와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엄마 재소자가 원한다고 해서 교도소 밖에 있는 아기를 항상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엄마 재소자가 아기의 교도소 입소를 신청하면 입소 위원회(admissions board)가 회의를 열어 아기가 교도소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기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논의하고, 해당 교도소의 MSU 여유 공간 등 물리적인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 영국 정부가 임산부 및 엄마 재소자 보호 정책을 추가로 발표한 배경에는 지난해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발생한 아기 사망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여성 전용 교도소인 브론즈필드 교도소에서 임산부 재소자가 혼자 감방에서 출산하다가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영국 정부는 별도의 관심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임산부 재소자를 제대로 감독하고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영국 언론 가디언지에 따르면, 브론즈필드 교도소는 영국을 포함해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여성 전용 교도소로 지난해 기준으로 최대 557명을 수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일부 교도소를 민간 기업이 정부에게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하는데, 브론즈필드 교도소는 소덱소 법무 서비스(Sodexo Justice Services)라는 영국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다. 당시 영국 언론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민영화된 교도소의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 영국 정부는 이와 동시에 교도소에 수감된 임산부와 교도소 내 출산 현황을 영국 전역 교도소에서 전수 조사해 공식 통계를 만들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정보가 교도소 별로 별도로 저장돼 분리돼 있어 전국 통계를 한눈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도소 별로 흩어진 정보를 중앙 기관인 교정본부(Prison Service)가 한데 모아 필요 서비스를 예측하고, 임산부 및 엄마 재소자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GOV.UK(2020.07.31.), "Prison Life", <https://www.gov.uk/life-in-prison/pregnancy-and-childcare-in-prison> (접속일: 2020.08.25.)
- GOV.UK(2020.07.31.), "Review of operational policy on pregnancy mother and baby units and maternal separ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view-of-operational-policy-on-pregnancy-mother-and-baby-units-and-maternal-separation> (접속일: 2020.08.25.)
- The Guardian (2019.10.04.), "Baby dies in UK prison after inmate gives birth alone in cell",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oct/04/baby-dies-in-uk-prison-after-inmate-gives-birth-alone-in-cell> (접속일: 2020.08.25.)